

월요광장



이 상 먼  
광주대 교수

지난 9월18일 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결국 부결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시켰다는데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2차 대전 후 많은 민족들이 주권국가의 독립을 꿈꾸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지역의 자치 및 경제적 자립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생활기반이 흔들리면서까지 독립을 쟁취하는데 의미를 찾지 못했다. 독립보다는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고, 상당한 실리를 챙기게 되면서 향후 영국 내에서 스코틀랜드 지역의 힘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강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해체되면서 지역 주민의 주된 관심은 주권국가 수립을 위한 민족운동이 아니라 지역의 자치와 경제자립을 희망하는 주민운동이 된 것이다.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역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조망되기 시

## 스코틀랜드의 교훈과 지역의 의미

작하였다. 그전 거시경제 황금기에 지역은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낙후의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하지만 케인즈 거시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가속되면서 지역이 새로운 범주로 등장한다. 실리콘밸리에서 보듯이 지역의 힘만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산업을 태동, 발전시켰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재정압박의 여건 하에서 산업육성과 고용창출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단위로 지방이 부상하였던 것이다.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이 점차 효력을 상실하면서 지방단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와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부터 시작한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정책의 제1목표는 경제성장이었다. 당시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는 역시 국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지역발전이 목표가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이 목표였고, 각 지역은 국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필요한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 전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역을 수단으로 취급하였던 국가중심적 사고방식이다. 국가가 발전하면 지역은 저절로 따라서 발전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제대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발전이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을 가져온다. 각 지역이 고루 발전하면 국가는 저절로 발전하는 아래로부터의 샘물효과(trickle up effect)를 추구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체제 대신에 다품종 소량생산, 지역자원 활용, 공동체 주도, 협업이라는 새로운 상품 또는 생산방식에 주목한다.

대량생산체제에서 지역은 입지로서 한정된 의미만을 가졌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지역은 주민 생활의 장이고,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내발적 성장의 터전이다.

지금도 대부분 지자체의 발전정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외부기업을 유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거나 외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전략은 하향적이고 외부지향적인 사업 특징으로 인해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이 배제됨으로써 지역적 관심과 참여를 얻지 못해 점차 자생력을 잃게 되는 한계를 보였다. 단순조립형 공장 유치는 외부 종속과 이윤 유출 등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예산을 가능한 한 더 많이 받아오는 단재정이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성과에 관계없이 예산 투입만 중시되는 구조 하에서는 지자체가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에 집중할 수 없다. 내발적 발전전략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역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착근시키는 전략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지역의 민관 파트너십 활용을 통해 자립적인 발전에 성공한 사례가 국내외에 많다. 지역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전환마을(유럽, 호주), 로컬푸드 운동, 슬로시티 운동, 에코뮤지엄, '지역을 사자(buy local)' 운동, 제3이태리와 같은 장인적 산업지구 구축 등 우리 지역에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다.

지자체의 우선적인 관심이 외부 투자 유치에서 지역산업 육성, 사회적자본 축적,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역기업 창업지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으로 빨리 바뀌어야 한다. 내발적 발전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지역자원 발굴과 지역역량 구축이고, 그 활동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발전의 성과를 지역에 남기는 활동에 주민들이 더욱 헌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참가하기 때문이다.

법조칼럼



류 지 원  
광주지법 판사

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범죄 중 주로 강제추행을 담당하고 있는 항소심 판사입니다. 재판을 하다보면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하는 피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뒤에서 가볍게 끌어안는 행위',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정도는 강제추행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손자뻘 되는 아이들이 예뻐서 한 행동인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에 무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강제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생각과 법원의 판단이 다소 다르기 때

## 상대방에 불쾌감 준다면 강제추행

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성범죄에 반드시 부가되는 부수처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 함은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다음에 추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습추행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한 경우도 폭행과 협박이 동시에 수반되어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추행행위가 넓게 보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뜻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가해자는 추행하려는 의사나 목적 없이 한 행동 이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였다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행위들도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였다면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 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하니 거창하고 무서워 보이는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지만, 법원은 강제추행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죄는 이제 피해자가 고소하여야 처벌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도 성범죄의 일종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된 신상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등록한 신상정보는 공개·고지되며 일정 기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이런 행동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정절차와 처분을 부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처분들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옛날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을 일들을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불필요한 전과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함부로 만졌고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흥에 겨워서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별 뜻 없이 한 행동들이 본인에게 돌아갈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오고, 상대방에게는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연발이라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은 시기입니다. 서로를 조금만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해를 즐겁게 잘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 고



안 용 훈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최근 광주시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통영시와 창원시의 도시재생현장을 둘러보는 투어를 통해 도시생각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스스로 유지시켜나가는 유기적 생명체라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도시재생투어를 하면서 도시를 보는 관점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면서 시너지효과와 관련된 떠오르는 책이 있다.

주부로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시민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제인 제이컵스 여사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

## 시민이 행복한 도시재생 되려면

can Cities)이라는 책이다.

그녀는 책을 통하여 낡은 건물을 부수고 대형 건물을 짓는 방식의 도시재개발은 오히려 도시를 죽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오직 수익성과 편의 위주의 도시 공간재편은 '인간성'을 상실한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도시를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도시 속에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불가분의 요소로 얽혀 있음을 해설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투어를 통하여 필자는 통영의 '동피랑 마을'에서 제인 제이컵스의 생각과 사상을 만날 수 있었다. 동피랑 마을은 동쪽의 비탈진(비랑) 마을이란 의미로 통영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다고 한다.

통영시는 도시정비를 위해 동피랑 마을을 철거하고 아파트·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푸른 동영21'이라는 시민단체가 공공미술의 가치를 바탕으로 2007년 전국 벽화공모전을 열었고 동피랑은 전국의 화가들과 학생, 시민들의 작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통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객들이 벽화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년마다 개최되는 벽화공모전으로 벽화들도 2년마다 전면 교체된다고 하니 동피랑 마을의 미술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중인 셈이다.

또 하나의 방문지인 창원시의 '창동에 숲촌'을 통해서도 21세기의 도시재생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창동에 숲촌'은 1990년대까지 마산 상권의 중심지로 서점·영화관·먹자골목 등이 모여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변화가였다고 한다.

또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의 거와 부마항쟁의 아픔을 품고 있는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산시의 경기침체로 상권이 죽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도심은 급속히 공동화되어 갔다.

그러던 창동이 변화된 것은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장원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을 브랜드화하여 문신골목을 조성하면서 부터이다. 지금의 창동 예술촌은 지역 문화·예술의 부흥과 상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투어를 여러번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다녀온 통영 동피랑과 창원의 창동에숲촌의 투어는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필자에게 많은 상념(想念)을 주고 있다.

'도시기획=개발'이던 시절의 결과물 속에서 사는 현재의 도시민들은 과연 행복하냐는 것이다.

낡고 오래된 동네라고 하여 전부 철거하고 고층 아파트를 건립한 그간 우리의 도시재생의 결과는 이웃이라는 공동체를 없애버렸고 역사적 장소성도 소멸시키지 않았는가? 도시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도시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상상하는 도시의 미래를 좋은 생각들, 재미, 새로움, 낯선 장면들로 조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도시재생투어를 다녀와서 많은 상념도 있지만 남다른 각오도 생긴다. 다양한 삶들이 서로 얽히고 의지하고 풀벌레 소리 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오는 상상력이 도시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社 說

## 한빛원전 물고기 폐죽음 책임 회피 안된다

영광 한빛원전 앞 바다 물고기들이 폐죽음을 당하고 있다. 원전 취수구에 서 유입 물질을 차단하는 스크린에 치어 등 어류가 부딪쳐 하루 평균 300만 마리 이상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한빛원전 주변 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취·배수구 등 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채집된 어류는 3835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의 2만4031마리보다 85%가 줄어든 것으로, 원전 앞바다의 물고기 씨가 마르고 있는 셈이다. 채집 당시의 출현 어종 수도 2007년 90종에서 지난해 76종으로 35%나 감소했다.

원전은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취수구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연간 해수 사용량이 115억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스크린에 부딪쳐 하루 평균 폐사하는 어류 수만 3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영광지역 어민들은 물고

기를 찾기 어려워지자 몇 시간씩 배를 몰고 먼바다로 나가야 하는 등 손실을 떠안고 있다. 유류 소비 증가와 장시간 운항 등에 따른 물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어떤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빛원전은 잦은 고장에다 관리 부실, 방사능 유출 및 은폐 의혹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이 최근 원전 반경 5km 이내에서 채취한 수산물·해조류·토양의 방사성 오염도 조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논란마저 날고 있다.

한빛원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물고기 집단 폐사와 어떤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먼저 어류 보호를 위해 취수구에 보호막을 설치하거나 스크린 충돌 완화 장치 등 기술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개체수와 어종 수 감소에 따른 어민 피해도 조사와 협상을 통해 보상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무주택 서민 올리는 '뺏다방' 두고만 볼 건가

광주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공공분양 주택이 '뺏다방'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1년 전매 제한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까지 합세한 불법 분양권 전매가 판을 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분양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불법투기를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어 그 심각성을 다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LH가 공공분양 주택의 당첨자 발표를 하자 남구 노대동 효전2지구 견본주택은 불법 분양권 전매로 물살을 앞섰다고 한다. 40~50명의 뺏다방 사람들이 "웃돈을 3000만 원 더 주겠다"며 당첨자들을 회유, 순식간에 상당한 양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이 불법 투기세력의 '돈벌이 장'으로 전락한 셈이다.

더 한심한 것은 LH 관계자들의 태도다. 이날 뺏다방들이 버젓이 불법거래

를 하고 있는데도 LH 직원들은 그 현장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중대 범죄다. 그럼에도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불법투기를 부추겼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실 뺏다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3000만 원의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이 불법거래됨으로써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된 공공주택은 시세를 훌쩍 넘어섰다. 결국은 다른 무주택자들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최근 타지역 뺏다방들이 광주 주택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제 해법은 자명하다. 이들이 더는 광주 주택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사법당국이 강력 단속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청약일 전에만 추소를 이전하면 외국인도 청약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겨울이 가까워지면 동·식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월동체비에 나선다. 활엽수는 단풍진 잎을 떨군다. 다람쥐는 도토리 등 먹물거리를 열심히 모으고, 반달곰은 제 몸이 지방분을 축적한 후 겨울잠을 잔다. 시베리아에서 활동하던 재두루미 등 새들도 따뜻한 남쪽 나라로 향한다.

겨울이 매섭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겨울잠을 잘 수도, 남행을 할 수도 없기에 찬 바람을 막아줄 집과 따뜻한 음식이 없다면 험겨울 수밖에 없다.

한양대 정민 교수가 엮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차 문인인 정창관이 덕 무(1741~1793)의

겨울나기

'청언소품'(淸言小品)을 읽다가 재미있는 대목을 접했다. 그는 엄동설한을 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입김을 불뎠 성애가 되곤 해 이불깃에서 버석버석하는 소리가 났다. 내 게으른 성품으로도 한밤 중에 일어나 창졸간에 '한서'(漢書) 한 질을 가지고 이불 위에 죽 늘어놓아 조금이나마 추위의 위세를 누그러뜨렸다.···간밤에도 집 서북면 모서리로 매서운 바람이 쐬어 들어와 등불이 몹시 다급하게 흔들렸다. 한동안 생각하다가 '논어' 한 권을 펼쳐 세워 바람을 막고는 혼자서 그

경제의 수단을 뵈내었다."

'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으로 겨우 얼어 죽기를 면한, 책밖에 모르는 가난한 선비는 "이것이 아니었다더라면 거의 얼어 죽은 진사도(송나라 때 시인)의 구신이 될 뻔했다"면서도 "한나라 왕장이 쇠덕석을 덮고 누웠던 것이나, 두 보가 말안장을 깔고 난 것보다 낫다 할 것이다"고 호기를 부린다.

예전에는 한지로 바른 문에 뚫린 바늘구멍이나 문풍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황소바람'이라고 불렀다. 지금처럼 두터운 콘크리트 사면 벽에 막히고 아랫목·

웃목이 따로 없어 단열과 방풍이 확실한 아파트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겨울풍경이다.

지난 21일은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 소설(小雪)이었다. 흔히 '무등산에 눈이 세 번 내리면 시내에 첫눈이 내린다'고 하니 곧 광주 시가지에도 눈송이가 내릴 터이다.

굶주린 날짐승을 위해 '까치밥'을 남겨두듯이 우리 모두 복지 시가지대에 기여하는 귀한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애정 어린 관심을 뒤야 할 것이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정리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지털 신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